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권유림 변호사(법률사무소 울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송시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채수지 변호사(법률사무소 백,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최용범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한주현 변호사(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감수〉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간사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그동안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보다 손쉽게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4월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 테이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발 맞추어 우리 국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의 유기 및 학대 사건,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웃간 분쟁 등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그동안 동물권 관련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 변호사님들을 집필위원으로 모시고, 작년 9월부터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입양 관련 분쟁, 이웃간 분쟁, 의료 분쟁, 반려동물 교통사고, 펫푸드의 제조물 책임, 반려동물의 장례절차 등 유형별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실무를 담고 있으며, 동물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기타 동물 이슈에 관한 내용, 그리고 동물사건 법률지원 시 유의사항까지 폭넓게 동물 관련 법률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향후 동물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들에게 본 매뉴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신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매뉴얼을 통하여 동물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실 회원 및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박 종 우**

CONTENTS

제1장 동물관련 법령의 이해 ----- 1

1. 동물관련 법령의 개관 -----	4
가. 동물보호법 -----	4
나. 야생동물 -----	6
다. 전시/오락동물 -----	7
라. 농장동물 -----	7
마. 실험동물 -----	7
바. 민법, 형법, 헌법 -----	8
사. 기타 -----	8
2. 동물관련 법령의 이해 -----	8
가. 들어가며 -----	8
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10
다. 동물에 대한 의무 -----	10
라. 철학적·역사적 기원 -----	11
마. 구체적 검토 -----	12
바. 결론 -----	15

제2장 동물학대 사건 지원 ----- 17

1. 동물학대의 의의 -----	19
2. 유형 및 관련 판례 -----	19
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법 제8조 제1항) -----	19
나. 폭행, 애니멀 호딩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법 제8조 제2항) -----	27
다. 유기·피학대 동물 등 포획·판매·살해 등(법 제8조 제3항) -----	34
라. 유기행위(법 제8조 제4항) -----	34
마. 도박이용 등(법 제8조 제5항) -----	34

3. 동물학대 대응 방법	35
가. 경찰 신고	36
나. 구청 신고(동물학대 긴급격리조치 요청)	36
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상담센터	36
라. 동물보호단체 조력 요청	36

제3장 유형별 분쟁 지원 39

1.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및 입양과 관련된 분쟁	41
가. 동물의 생산, 판매 및 분양	41
나. 유기동물의 입양	45
다. 동물 입양자의 의무	51
2.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	52
가.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52
나. 길고양이 관련 분쟁	56
다. 공동주택 분쟁	61
3.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66
가. 자가진료	66
나. 수의사 아닌 자에 의한 안락사	68
다. 수의료 사고	70
4. 교통사고	75
가. 반려동물 동승 시 차량 탑승 방법	75
나. 반려동물과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 적용 및 위자료 인정 여부	75
다. 구체적인 사고의 유형	78
5. 펫푸드 제조물 책임	81
가. 사료관리법	81
나. 제조물책임법	82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9-3호)	83
라. 최근 발생한 관련 사례	84

6. 장례절차	85
가. 반려동물의 죽음	85
나. 반려동물의 장묘	86

제4장 기타 동물 이슈 89

1. 야생동물	91
가. 야생동물 관련 법적 분쟁 유형	91
나. 야생동물 관련 법령	92
다. 분쟁 해결 방법	93
2. 전시/오락동물	96
가. 개팔	96
나. 오락과 동물	96
다. 동물전시업	97
라. 동물원법	97
마. 구체적 사례	100
3. 농장동물	102
가. 분쟁 유형 및 관련 법령	102
나. 분쟁해결방안	104
다. 판례 등 관련 사례	105
4. 실험동물	106
가. 동물실험의 원칙	106
나. 동물실험 관련 규정	107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법 규정	111

제5장 동물사건 법률지원 시 tip 115

1. 상담 관련 일반 자세	117
2. 증거의 체계적 수집 필요성	117
3. 언론 또는 국민 청원 등을 통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부각	118

제6장 유관기관 ----- 119

1. 동물보호센터 -----	121
가. 설치 근거 -----	121
나. 주요 업무 -----	121
다. 동물보호콜센터(1577-0954)의 활용 -----	122
2. 서울시 산하 기관 -----	122
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122
나.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	123
3. 동물보호단체 -----	123
가. 주요 업무 -----	123
나. 활용 방법 -----	124
다. 단체 현황 -----	124
4. 관련 법조단체 -----	124

부록 ----- 1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	12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	12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3 관련) -----	13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제35조제2항 관련) -----	13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	140

제1장

동물관련 법령의 이해

》 제1장

동물관련 법령의 이해

몇 해 전 영화 ‘옥자’에는 슈퍼돼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 ALF)이 등장합니다. 동물해방전선은 1963년 영국에서 창설된 실제 존재하는 단체로, 외국에선 동물의 권리를 위해 ‘직접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은 “식량 생산 자체가 착취”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도살장이나 동물원 실험실 철창을 부수고 동물들을 탈출”시키는 “동물 애호가”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인간 이외의 동물은 인간처럼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인간들의 행위(대표적으로 육식)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물해방전선의 위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책에서 살펴보듯 실무 법률가들은 민법, 형법, 행정법, 헌법 등 각 분야에서 동물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마주치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론(통설)을 적용하면 해결되는 사건을 보통 ‘쉬운 사건’(easy case)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물과 관련된 사건은 ① 통설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예외를 인정한 실무례(법령 또는 판례)가 다수 발견되고 ②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통설의 수정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최근 동물관련 사건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첨예한 사건 또는 ‘어려운 사건’(hard case)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동물관련 법령의 열개와 동물관련 법령을 다루는데 필수적인 기본원칙을 살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관련 법령은 일반법으로서 동물보호법과 기타 특별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다시 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칙에서 동물보호법은 그 목적과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은 일반·추상적인 단어로 쓰여진 이 목적과 기본원칙이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1 동물관련 법령의 개관

가. 동물보호법

(1) 연혁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동물보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국제동물보호기금(IFAW)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하여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여 세계적인 논란이 일었고, 이러한 논란이 당시 정부로 하여금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¹⁾ 당시 시대 상황 상 동물보호법의 제정은 대단히 선진적인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정 동물보호법에서 학대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징적인 입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전면개정되면서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장됐고 징역형이 추가되어 학대행위에 대한 실효적 규제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지금도 거의 매해 법이 개정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제정 동물보호법 심사보고서 전문위원은 '80년대초부터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의 도살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의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있어 대외적으로 동물보호의지를 천명하고'라며 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성격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이용·관리에 관한 일반법입니다(제6조).

(3) 구성

(가) 총칙

동물보호법 총칙에서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조), 동물복지위원회(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물학대 관련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관련 규정으로는 동물학대의 금지(제8조), 동물의 운송방법(제9조), 동물의 도살방법(제10조), 수의학적 방법으로만 허용되는 동물의 수술(제11조) 등이 있습니다.

(다) 동물의 등록, 유기, 보호 등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제12조) 및 관리(제13조), 피학대 또는 유실동물을 구조할 자치단체장의 의무(제1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제15조), 지자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제20조) 및 처리방법(제21조, 제22조)을 정하고 있습니다.

(라) 동물실험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관하여 동물실험의 원칙(제23조), 실험을 위한 동물실험윤

리위원회의 설치(제25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관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마) 동물 관련 영업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축산농장(제29조 내지 제31조), 동물판매업 등 동물관련 영업에 관한 규정(제32조 내지 제38조의2), 관할부서의 권한(제39조, 45조)을 정하고 있습니다.

(바) 벌칙

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여도 이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²⁾. 향후 위 법정형 또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나.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제1조). 이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천연기념물 동물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8조, 멸종 위기종을 재료로 한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 제43조, 수산업법 등이 직·간접적으로 야생동물을 규율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2021. 2. 21.부터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6조 제1항).

다. 전시/오락동물

전시 또는 오락 목적과 관련된 동물에 관한 규율은 크게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분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8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5항 제2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관한 동물전시업(제32조 제5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이에 관한 규율을 정한 법입니다. 다만 동물전시업 관련 법령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에 대한 보호 및 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넓지 않아 전시/오락 목적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동물원, 동물카페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라. 농장동물

일반적으로 농장동물은 ‘가축’이라고 정의됩니다. 농장동물에 대한 법률은 그 규율영역과 목적에 따라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의사가 아니어도 자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수의사법 제12조 제3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법률이 정의하는 ‘가축’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이 아닙니다. 하지만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마. 실험동물

동물보호법은 제3장에서 동물실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 민법, 형법, 헌법

동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민법 조항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제98조입니다. 민법은 그 외에 야생동물을 무주물로 보는 민법 제252조 3항,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9조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형법상 동물에 대한 상해는 재물손괴에 관한 제368조가 적용됩니다. 헌법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3조,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1항을 통해 헌법상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및 이에 따른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있습니다.

2 동물관련 법령의 이해

가. 들어가며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도대체 잔인한 방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민법 상 동물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려동물은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감정상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할까요? 나아가 이 경우 민사상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야생동물들에게 부당해 보이는 침해가 발생할 경우 야생동물은 이를 다투는 소의 원고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위 의문에 한 차례 이상 직면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판례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4698 판결,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 2004마1149(병합) 결정).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물론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도 위 판결문을 읽으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의문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물에 관한 판례는 민법, 형법 등 기존의 법분야에서 통용되는 법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둘째, 통용되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판례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물법’이라는 독자적인 법분야와 이 분야의 일반적인 원칙 또는 해석기준이 요청됩니다.

이 장에서는 동물법 분야의 일반적 원칙과 해석기준을 살펴봅니다. 동물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일반·추상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서 법문언만으로는 그 규범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는 원칙들의 철학적·역사적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후자는 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관련 법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철학적·역사적 연원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9년 영국 농장동물복지 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 FAWC)가 발표한 동물의 5대 자유(Five freedoms)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³⁾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고픔, 갈증,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3.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4.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Freedom to Express Normal Behaviour)
5.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다른 자유와 달리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는 외부의 고통으로부터(from)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넘어 스스로의 본성을 발현할(to) 적극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즉, 동물의 5대 자유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동물보호법 제3조는 동물의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 동물에 대한 의무

동물보호법은 ①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

3) 유선봉,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참조

되도록 노력할 의무 ②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 ③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 제2조 제3호). 동물운송업자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의 경우 별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의무들은 앞서 살펴 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서 쉽게 도출되고 그 내용상 동물의 소극적 자유를 보호할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동물들에게 ‘(각)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역시 ‘(각)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은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 적절한 또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는 소극적 자유 보호를 넘어 적극적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므로 이를 적극적 자유 보장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동물실험은 동물의 생명 존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이를 동물의 생명 존엄성 고려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라. 철학적·역사적 기원

동물의 권리에 반대하는 철학적 역사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자연이 인간을 위해 나머지 동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대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은 고통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과 똑같은 기계적 반작용에 불과하다며 동물 실험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벤담입니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시대의 대표적 윤리학자로 손꼽히는 피터 싱어는 벤담의 생각을 계승·발전시켜 『동물해방』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현시대 동물 권리 담론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책에서 그는 인간만이 도덕적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태도를 종차별주의(speciesism)이라고 부르며 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이자 유명한 법이론가인 리처드 포스너는 동물의 권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는 법률 소송에서 동물의 권리라는 단어를 남용할수록 덩달아 인간의 권리도 하찮아 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포스너도 동물보호의 대의(大意)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인간은 동물들과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으므로 동물 보호는 곧 인간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물보호법 등 실정법을 현실적으로 운용하여 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싱어와 의견을 같이합니다.

마. 구체적 검토

(1) 실정법의 해석과 동물의 권리

동물의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권리와 같은 의미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한 법률도 없습니다. 때문에 법학 실무에서 동물의 권리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실무 법학은 이미 이에 대한 논의의 자장(磁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은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물건(thing)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

물보호법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동물의 소극적 자유 보호 의무, 적극적 자유 보장 의무, 생명 존엄성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등 실정법은 수천 년에 걸친 동물 권리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동물 권리 담론을 일절 배제하고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제3조가 규정한 기본원칙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구체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이 기준은 동물 권리 담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동물, 독특한 물건

인간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게까지 동물보호법 상의 의무를 부과하며 학대행위를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합니다. 실정법상 동물은 물건이면서 다른 물건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집니다.

오스트리아 민법 제285a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스위스 역시 위와 유사한 민법 제90a조, 민법 제641a조를 두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과거엔 우리나라 민법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였으나, ‘동물은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⁴⁾

민사법 분야의 통설과 판례는 물건이 파괴되었을 때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물질적 손해에 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물건을 상실함으로써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물은 ‘독특한 물건’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은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는 배상을 받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됩니다.

4) 윤철홍, 스위스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68호

반려견이 입은 상해에 대하여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애 1급의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자신의 개를 양육해 왔는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64698 판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잔인하다’는 가치판단은 사람 및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기 쉽습니다(15페이지 서울고등법원 판결 참조).⁵⁾ 그러나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②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을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서는 안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15페이지 대법원 판결 참조).

5)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판결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및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참조.

개 전기도살 사건(서울고등법원)

‘잔인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다’는 것이나, 아직 판례상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더욱이 ‘잔인하다’는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 상대적인 개념인데다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칫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나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위헌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잔인한 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문언과 해석에 부합하면서도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노2030 판결).

개 전기도살 사건(대법원 파기환송)

‘잔인’은 사전적 의미로 ‘인정이 없고 아주 모질’을 뜻하는데,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인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살펴, 구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의미와 입법 취지,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바. 결론

현행 동물관련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는 키워드를 하나 골라야 한다면 이는 ‘독특한 물건’입니다. 고전적 또는 전통적 법률 이해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고 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동물이 법적으로 왜 독특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현행 동물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이해하는 올바른 해석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 권리 또는 동물 보호에 대한 담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이 영향을 받아 전세계적으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

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철학적·역사적 기원을 도외시하고서는 현행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법상 동물이 곧 물건이라는 생각은 뿌리가 깊어서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들이 동물의 독특한 특성에 기초하여 입법되었으며 최근 판례의 경향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을 독특한 ‘물건’에서 ‘독특한’ 물건으로 옮기는 것은 법실무가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2장

동물학대 사건 지원

》 제2장

동물학대 사건 지원

1 동물학대의 의의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살해하는 행위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학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2 유형 및 관련 판례

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법 제8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호),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2호),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3호),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호)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경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법 제46조 제1항). 2020. 1. 9.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 2. 11.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호)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도살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도살에 사용되는 도구, 도살행위 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잔인한 방법’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유죄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외견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고, 동물이 고통을 덜 느꼈다는 등의 그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것이지 구성요건 자체의 조각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검사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본 조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던 사례들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인정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 사례

①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 사건(일명 ‘나비탕’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부산시 일대의 주택 근처에서 고양이 약 600마리를 포획하여 건강원 업주들에게 산채로 판매하거나 김해시 소재 보신원에서 고양이를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후 가공하여 고기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점,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2심에서는 검사가 고양이 300마리를 죽인 행위와 300마리를 판매한 행위를 나누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 제1호로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하여 형량이 최고 6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높아졌으나 결국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노799 판결).⁶⁾

②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소유의 개(로트와일러) 2마리가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를 물어 뜯는 등 공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위 개들 중 1마리를 1회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유죄로 하여 벌금 30만 원 및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받아들여 동물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재물손괴죄 역시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⁷⁾

6) (사)동물권 행동 카라·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2018, 27.

7) (사)동물권 행동 카라·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2018, 8-14.

③ 개 전기도살 사건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등 연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전기도살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살법을 규정하고 있는 도축 규정이 이 사건에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조항의 형사 처벌의 구성요건인 "잔인한 방법" 여부는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도살방법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그 사용되는 도구, 행위 형태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의 전기도살 행위는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며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이라는 1차적 법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진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도살 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노2595 판결). 그 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20도1132 판결).

④ 무허가 도축장 도살 사건

무허가 도축장에서 다른 개들이 보는 가운데 철사로 된 울가미로 개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 죽인 사례(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 6890 판결)와 역시 무허가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2~3마리의 개를 전기 충격기 또는 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죽인 사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9. 8. 선고 2016고단877 판결)에 대하여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죽인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개를 도축 및 판매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개를 죽인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죽이는 것, 전기충격기 등으로 죽이는 것은 모두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들의 경우 무허가 염소 도축 판매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등 위반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인정되어 1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사건의 피고인은 흑염소 도축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⑤ 시컴스 살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시컴스’라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회 내리쳐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에게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형법 제366조(손괴) 위반으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고단4840 판결).

⑥ 화물차 역과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스피츠 중형견 1마리(몸무게 7kg)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톤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개를 역과하여 죽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66조(손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9. 2. 선고 2016고단1402 판결).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2호)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동물학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상 등 공개된 장소의 경우 길거리와 같이 반드시 사방이 탁 트인 장소일 필요까지는 없고 주택 뒷마당이라 할 지라도 도로에 근접해 있는 등으로 인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면 인정되고 있습니다(사례 2 참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고양이가 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살해한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사례 1 참조).

◎ 사례

①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경의선 숲길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세탁세제를 섞은 사료와 물을 주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기르는 다른 고양이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움켜쥐고 들어 올린 후 수회 땅바닥과 테라스 벽에 내리찍고 바닥에 늘어진 고양이 머리에 세제를 섞은 물을 부려 고양이가 움찔거리자 발로 고양이 머리 부위를 수회 세게 짓밟아 죽인 후 고양이 사체를 화단의 구석진 곳에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 2803 판결).

② 소유자 부탁으로 개를 죽인 사건

이 사건 피고인은 개 주인으로부터 개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로에 접한 공개된 장소인 주택 뒷마당에서 대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개에게 가스토치로 불을 쏘아 타게 하는 방법으로 개를 죽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의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12. 6. 선고 2012고정460 판결).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3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물학대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동물이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도록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임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게 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애견판매점 동물 78마리 살해 사건

애견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애견판매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홍역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고 질병 전력 등으로 인해 향후 사실상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강아지 78마리를 수의사의 객관적인 진단 및 진료, 충분한 영양공급 등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애견판매점 2층 창고에 순차적으로 올려놓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학대하여 위 강아지 78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 행위 및 수의사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개들에게 투약하여 진료한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13. 선고 2018고단530 판결).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4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동물을 죽이는 대표적인 방식을 열거하고 있고, 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체계와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3항,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제8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모법의 위임취지에 따라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의미와 이에 따른 위임의 취지 및 범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위와 같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졌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모법이 명시하고 있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를 아예 규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모법이 위임한 바대로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⁸⁾

◎ 사례

① 귀신을 쫓기 위해 강아지를 살해한 사건

피고인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포메라니안)를 얼음물에 담그고, 얼음물을 강아지 머리에 붓고, 강아지 목을 흔들고, 강아지의 몸을 눌러 강아지를 죽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였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630 판결).

② 이웃 협박 목적 고양이 살해 사건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미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 그곳에 있는 돌로 머리를 내리쳐 죽이고,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목을 졸라 죽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구 동물보호법(2011. 0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조항)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8. 12. 2011고단723 판결).

8) (사)동물권 행동 카라·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보호법 판례 평석, 2018, 42.

나. 폭행, 애니멀 호딩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법 제8조 제2항)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제1호), ②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제2호), ③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제3호), ④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3의2호), ⑤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가 그것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먼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②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③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가 본 조항의 예외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 사례

① 애견센터 강아지 상해 사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이 반려견 소유자가 맡겨 놓은 베들 링턴테리어 종인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그곳에 있던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발로 강아지의 전신 부위를 수차례 차 강아 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에 의한 전신적 피멍 등을 입게 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 등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제주 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단1990 판결).

② 쇠파이프 상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삽살개가 자신이 기르고 있던 닭 5마리를 물어 죽이자 이에 격 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122cm 길이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개집 안에 갇혀있던 삽살개를 쇠파 이프로 수회 찔러 상처를 입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구 동물보호법(2011. 8. 4. 법률 제 10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1호(도구 사용 동물 상해) 위반 등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29. 선고 2012고정 326 판결).

③ 빗자루 상해 사건

자신이 기르는 개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빗자루 막대기로 개의 귀 부분을 때려 개의 귀 부위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처를 입혀 학대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벌 금 3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정784 판결).

④ 수술 취소 사건

수의사인 피고인이 강아지 주인의 집 앞에서, 주인이 강아지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고인이 치료를 위해 봉합했던 강아지 목 부위의 봉합실 5바늘 중 3바늘을 수술가위를 이용하여 다시 잘라내어 강아지 목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동물보 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 주지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1110 판결).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질병의 치료, 동물실험 등 제외)(제2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동물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되는데 이는 제1호의 예외사유와 동일하게 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②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③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입니다.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① 곰 쓸개즙 채취 사건

의사 또는 약사가 아니면서 곰 쓸개즙을 판매하는 피고인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곰 사육장으로 데리고 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 갇혀 있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총으로 마취한 후 반달가슴곰을 수레에 싣고 사무실에 들어와 초음파 기계로 곰 쓸개 위치를 확인하고, 긴 바늘을 반달가슴곰 가슴에 찔러 호스로 곰 쓸개즙을 뽑아 채취한 뒤 이를 소주에 탄 뒤 시식케 한 후 곰 쓸개즙을 판매하는 등 총 87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재판부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6조 제1항,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제70조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4고단1310 판결).

② 이웃 고양이 울무 살해 사건

피고인이 철사로 만든 울무 6개를 자신의 집 담과 현관문에 설치하여 이웃 소유의 고양이의 목이 위 울무에 걸려 죽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그 형의 선고는 유예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2. 11. 2008고정6578 판결).

③ 강아지 신체 손상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다리를 들고 벽에 오줌을 싼다는 이유로 뒤 다리를 잡아 낚아 채서 다리뼈가 쪼개지는 상해를 입히고, 동거녀와 싸움을 하면서 화가 나서 강아지를 손으로 잡고 벽에 집어던져 골반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5. 10. 5. 선고 2015고단1828, 2447 판결).

④ 견사에 고양이를 던져 학대한 사건

피고인이 고양이 1마리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빨랫줄로 목을 묶은 다음 진돗개 2마리가 들어 있는 견사 안으로 집어던져 진돗개들이 위 고양이의 목 부위를 번갈아 물어뜯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살아 있는 상태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0. 3. 25. 선고 2009고정585 판결).

⑤ 차량에 개를 매달아 끌고 간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는 개를 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오른손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왼손으로 개 목줄을 잡고 끌고 다녀, 차량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개가 아스팔트 바닥에 끌리면서 개 발에 찰과상을 입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고단3480 판결,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5노52 판결).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민속경기 제외)(제3호)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민속경기 외에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위배됩니다. 투견, 무허가 소싸움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① 투견 사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투견을 사각의 철제 링에 넣어 다른 투견과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피고인의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처를 입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이 아닌 테스트 시험에 피고인 소유의 개를 다른 개와 싸우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타인 소유의 개에 베틀하여 도박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등을 적용하여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하였고, 자신의 개를 투견도박에 동원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2713 판결).

② 무허가 소싸움 사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설 소싸움 경기장을 설치한 후 소싸움을 벌여 소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고단364 등 판결).

(4)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3의2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킨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방임으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어 능력 이상의 과도한 마릿수의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칭 ‘애니멀호더 처벌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 시킨 경우에 본 조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육관리의무만 위반하였을 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았다면 본 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애니멀 호더라 하더라도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없다면 본 조항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 조항의 경우 반려동물에 한정하고 있어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동물단체 등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8. 시행예정인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제2조 제1호의3 반려동물의 정의에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2항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를 “반려동물에게”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5)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

이 조항은 열거된 유형 외에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유형으로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1호), ②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③ 갈증이나 굶주림

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호), ④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사례

① 암소 성학대 사건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축사에 묶여 있던 암소 7마리를 상대로 생식기 내로 팔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여 암소 중 6마리는 질 파열로 인한 자궁내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마리는 질내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죽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855 사건).

② 자전거에 개를 매달아 끌고 간 사건

피고인이 경기 양주시에서 지인으로부터 개 1마리를 구입하였으나 달리 개를 집으로 데려갈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개의 목줄을 피고인의 자전거에 연결한 후 그곳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개를 끌고 가면서, 내리막길에서 개가 따라올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내달려 위 개로 하여금 길 위에 넘어져 끌려가며 네 무릎부위와 배부위 피부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탈진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고단 2933,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472 판결).

③ 투견 사건

도박이 아닌 테스트 시험에 피고인 소유의 개를 다른 개와 싸우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타인 소유의 개에 베틀하여 도박을 한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및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등을 적용하여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고단2713 판결).

다. 유기·피학대 동물 등 포획·판매·살해 등(법 제8조 제3항)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라. 유기행위(법 제8조 제4항)

동물을 유기(遺棄)한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향길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길에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 유기행위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2020. 1. 9.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안 제46조 제4항 제1호 신설). 개정안은 2021. 2.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도박이용 등(법 제8조 제5항)

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유기·피학대 동물 등을 포획·판매·살해하는(동물보호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

진,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동물보호의식 고양 목적이 표시된 홍보활동 등 제외)(제1호), ②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제2호), ③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장애인 보조견 대여 등 제외)(제3호)를 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을 통해 동물학대 영상 등을 업로드 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고양이 학대 영상 유튜브 게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밧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4일 후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한후 위와 같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 5개 중 3개를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에 게시하고, 영상물 2개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하여 성명불상의 지인들에게 전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동물학대 영상물 전달), 동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5. 2. 선고 2017고단127 판결).

3 동물학대 대응 방법

동물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사진, 영상 촬영,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 농림축산부 동물보호상담센터,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므로 피학대동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수의사나 동물전문가의 조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가. 경찰 신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경찰민원콜센터 182로 문의하거나, 영상, 사진, 자백녹취, 증인 등의 범행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에서 국민신문고 범죄신고/제보> 일반범죄신고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나. 구청 신고(동물학대 긴급격리조치 요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상해에 이르는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경우 유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구청별 주관부서를 통해 동물학대 긴급격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통해 구청별 주관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상담센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77-0954이며, 업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라. 동물보호단체 조력 요청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보호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만 동물단체들의 인적·물적 여건상 모든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동물자유연대	02-2292-6337	https://www.animals.or.kr/sponsor/report
동물권행동카라	02-3482-0999	https://www.ekara.org/

제3장

유형별 분쟁 지원

》 제3장

유형별 분쟁 지원

1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및 입양과 관련된 분쟁

가. 동물의 생산, 판매 및 분양

(1) 동물생산업자의 의무

(가) 허가

1) 동물생산업이란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함)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호).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2호).

2) 결격사유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등에는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 제4항).

(나) 시설기준

- 1) 농림축산식품부령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9]). 따라서 반대해석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동물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판매업자의 의무

(가) 등록

- 1) 동물판매업이란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입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2호).
- 2) 결격사유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9)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등에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판매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6호).

- 1) 동물판매업자는 개·고양이의 경우 2개월 이상, 그 외의 동물의 경우 젖을 떼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6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10]).
- 2) 동물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 3)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① 해당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 방법, ②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4)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 기록 등,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판매일 및 판매금액,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

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5)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제3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개정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

(다) 동물판매 관련 분쟁의 해결

동물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약정된 품종이 아닌 동물을 판매하여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민법 제98조) 질병 등의 문제가 있는 동물을 판매한 경우 다른 동물로의 교환이나 환불과 같은 일반 민사 매매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별표2]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반려동물이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판매업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또는 구입가를 환불해야 하고,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구입한 후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판매업자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매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구입한 사람은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생명이므로 독일 민법¹⁰⁾과 같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정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10) 독일민법 제90a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그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나. 유기동물의 입양

(1) 유기동물 입양계약의 내용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임시보호자”라 함)가 다른 사람(이하 “입양자”라 함)에게 해당 동물을 입양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입양은 대개 무상으로 동물을 수여하는 증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입양자가 동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 입양책임비의 지급

최근 임시보호자가 입양자의 유기동물 입양에 관한 의지와 책임, 성실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입양계약서에 이른바 ‘입양책임비’를 명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양책임비는 대개 약 3~20만 원으로 책정되며, 보통 해당 동물의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임시보호자에게 유기동물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는 경우, 즉 입양책임비를 입양동물 자체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물판매업이라 함은 계속·반복의 의사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행위의 계속·반복성 여부를 비롯하여 판매의 동기,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노2815 판결). 따라서 임시보호자가 계속·반복의 의사로 입양책임비 명목의 대가를 지급 받고 유기동물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동물보호법이 규율하는 동물판매업으로,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33조 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에 관하여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이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동물의 근황을 고지할 의무

입양계약서에는 입양자가 임시보호자에게 해당동물의 근황을 정기적으로 고지할 의무, 해당동물의 최근 사진을 전송할 의무 등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의 종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의 고지의무를 부여한다면, 해당동물의 소유권자가 된 입양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당한 종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계약 위반시 위약벌 및 반환 의무

입양계약서에는 입양자가 고지의무 불이행, 동물 유기 등 입양계약을 위반할 경우 임시 보호자에게 해당동물을 반환하거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적정한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지의무는 계약의 부수적 의무에 해당할 것이므로 법정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벌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유기·유실동물 입양 관련 분쟁의 유형

(가) 피학대·유기·유실동물 원소유자의 등장과 소유권 분쟁

1) 피학대동물의 경우

가) 보호조치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제2호),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3호)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하여야 하며,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시·도지사 등이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제2항). 한편, 시·도지사 등이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¹¹⁾

나) 보호비용 및 동물의 반환

시·도지사 등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1호),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관하여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해당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제2호)에는

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조치 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해당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 이때 시·도지사 등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제2항).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1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2항 1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동물보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비용징수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동물의 소유자는 비용징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제2항), 동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며, 동물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은 수의사의 진단·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시·도지사 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 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2항 2문). 한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3항). 예컨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단, 동물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와 시·군·구는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제2호),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에 해당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2) 유기·유실동물의 경우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거친 경우

① 동물의 반환

시·도지사 등은 유실·유기동물(제14조 제1항 제1호) 및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 시·도지사 등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8조). 이 때 시·도지사 등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동물보호법 제19조 제1항), 이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9조 제3항).

② 소유권의 취득

시·도와 시·군·구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에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③ 동물의 분양·기증

시·도지사 등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으며(동물보호법 제21조 제2항),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 제3항). 예컨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6조에 의하면 동물보호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제1호),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2호),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제3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물보호법에 따른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동물이 자연사하거나 보호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안락사되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한 사인이 해당동물을 직접 임시 보호하면서 제3자에게 입양 보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에게 입양된 이후에 동물을 잃어버린 원소유자가 등장할 경우 해당 유실동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우리 민법에 따라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 법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즉, 평온, 공연하게 동물을 입양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임시보호자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9조). 다만, 그 동물이 도난 되었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동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50조 본문), 양수인이 도난된 동물 또는 유실동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동물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1조). 따라서 동물을 구조하여 입양 보낼 때에는 소유권 문제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동물 구조자가 입양 전에 소유자를 찾는 노력을 적절히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동물 입양자의 의무

동물을 입양하여 소유자가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¹²⁾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본문).

12)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2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② 길고양이 관련 분쟁, ③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유형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1) 분쟁 유형

개물림 사고와 관련된 분쟁은 피해를 입은 주체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반려견이 다른 동물(주로 다른 반려견)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를 입힌 주체인 개의 특성에 따라서도 분쟁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류의 반려견이 가해를 입혔을 경우와 그 밖의 일반적인 반려견이 가해를 입혔을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2) 일반적 분쟁 해결 절차

(가) 형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인 반려인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 등에 따른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라 함은 주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였는지를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이때의 ‘목줄 등 안전조치’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인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 또는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는 단순히 해당 반려견에게 목줄 또는 가슴줄 등을 착용시켰는지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반려견의 특성에 따라 예상 가능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만한 적절한 조치들을 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반려인이 목줄은 착용하였으나 입마개는 하지 않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만 6세의 어린이가 반려견에게 접근하자 목줄을 놓쳐서 해당 반려견이 위 어린이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재판부는 “반려인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다”고 하여 반려인 측의 손해 발생 책임을 80%로 인정하며 위 어린이 측에게 치료비 약 2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판결).

목줄만 착용한 진돗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피고인이 일반적인 목줄만을 착용시킨 채로 자신의 진돗개를 산책시키던 중, 그 진돗개가 역시 산책 중이던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과정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진돗개의 야생성,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목줄만을 채운 상태로 이 사건 진돗개를 산책시킴에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3628 판결).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려인의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반려동물로 하여금 다른 반려동물을 공격하도록 한 경우라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등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을 무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반려견의 소유자인 반려인은 민법 제759조 등에 기하여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사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와 동일하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일수익 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반려견이 다른 동물을 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피해동물에 대한 치료비와 그 사고로 인한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동물이 사망하였다면 장례비까지도 적극적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원고가 자신의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의 개가 원고의 개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애 1급의 원고가 애정과 정성으로 자신의 개를 양육해 왔는바, 이 사건 당시 원고의 개가 피고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함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에게 반려견에 대한 치료비와 더불어 원고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 64698 판결).

(3)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의 경우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각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이 아닌 일반적인 반려견을 키울 때보다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첫째,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을 반드시 동물등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맹견의 반려인은 자신 또는 다른 관리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도 착용하여야 합니다. 단, 잠금장치가 갖추어진 견고한 재질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넷째, 맹견의 반려인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시·도 조례로 특별히 정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맹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발생하여 반려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경우, 반려인이 위와 같은 관리의무들을 충분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피고인이 맹견인 ‘핏불테리어’를 외벽이 없어 마당이 개방되어 있는 집에서 기르다가,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식사슬을 개의 목줄 및 쇠말뚝과 연결해 두어 위 쇠말뚝에 연결된 식사슬 고리가 풀리도록 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위 핏불테리어가 피고인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여, 77세)의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고 끌고 간 결과,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재판부는 “핏불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개”라고 하면서, 그러한 핏불테리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보아 피고인에게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 위반으로 인한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2688 판결).

또한,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려인의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게 맹견을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격리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는바(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등), 맹견의 반려인은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맹견이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면, 맹견을 유기하였다가 맹견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반려인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의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과 더불어,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유기한 행위 자체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적 책임을 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2호, 제8조 제4항).

나. 길고양이 관련 분쟁

(1) 길고양이의 정의

길고양이란 보통 반려인 없이 야생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시행규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다만,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의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 동물에서 제외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의미합니다.

(2) 길고양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

동물보호법상 정의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는 주로 사람들이 많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살고 있으므로 길고양이를 둘러싼 법적 이슈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법적 이슈는 크게 ① 길고양이 학대행위, 그리고 ② 길고양이 돌봄 관련 분쟁으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가)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행위

길고양이는 포유류로서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이므로,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반려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다양한 동물학대행위에 쉽게 노출되곤 하는바, 그 학대행위의 유형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길고양이를 물리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보일러실을 더럽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새끼 길고양이 2마리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져 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의 척추 등에 크게 상해를 입힌 사건, 길고양이가 뒷발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포획해 1회용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3. 26.자 2018고정1 판결) 등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하는바,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2항 제1호, 제2호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고양이를 학대하고 학대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들고양이가 자신이 사육하는 병아리와 닭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제로 제작된 덮을 사용하여 고양이를 포획한 후, 철제로 제작된 우리에 가둔 뒤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고, 주전자로 끓인 물을 들이붓고, 고양이 몸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 학대하고, 그 이후 자신이 키우던 개로 하여금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게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결여한 채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죽였다. 이는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혹한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여 그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위 영상을 본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5항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5. 2. 선고 2017고단127 판결).

잔인한 폭행 등에 의한 길고양이 학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십만 원의 벌금형만이 선고되는 등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¹³⁾에서는 거의 최초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피학대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아닌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학대행위의 잔인성, 피학대 동물의 피해 정도 등만을 고려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길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쥐약 등의 독극물을 살포하여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전 신탄진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약 10년간 고양이가 싫다는 이유로 쥐약을 묻힌 닭고기를 길가에 살포해 길고양이를 살해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극물에 의한 길고양이 살해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등에 해당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약한 수사 의지로 인해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¹⁴⁾ 이 역시 반려인이 없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짐작되는 바, 동물 학대자가 사회 일반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유형이 있습니다. 부천시 한 마트에서 길고양이 포획틀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길고양이를 죽인 사건 등이 바로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인바, 실제로 고양이 600여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하여 산채로 끓는 물에 담가 도살한 일명 ‘나비탕’ 사건에서 학대자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 제1호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8. 10.자 2016노799 판결).¹⁵⁾

13) ‘경의선 숲길 고양이 학대사건’ 판례에 관하여는 제2장 동물학대 사건 지원 중 “2. 유형 및 판례”의 “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분을 참조

14) ‘쥐약 묻은 치킨 8마리 뿌려도 ‘살묘남’ 처벌 못하는 이유’, 중앙일보 이태윤 기자, 2018. 12. 27. 등 참조

15) ‘나비탕’ 판례에 관하여는 제2장 동물학대 사건 지원 중 “2. 유형 및 판례”의 “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분을 참조

(나)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둘러싼 이웃 간 분쟁

도시는 먹이의 부족, 자동차와 같은 위험요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길고양이가 자생적으로 살아남기에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길고양이에게 주기적으로 밥과 물을 주고, 추운 날씨에는 잠시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며, 아프면 구조해서 치료를 해주는 등으로 길고양이를 돌보아주는 소위 ‘캣맘’, ‘캣대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캣맘’, ‘캣대디’들의 활동은 인간이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캣맘’, ‘캣대디’들은 TNR¹⁶⁾ 등을 통해 길고양이가 길고양이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도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수가 증가한 데에는 집고양이를 무책임하게 유기한 인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활동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둘러싼 크고 작은 분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¹⁸⁾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스스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해당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고 발정기에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겨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6) TNR은 길고양이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Return)하는 것으로, 반복되는 길고양이의 출산을 막음으로써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TNR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등으로 길고양이 돌봄 행위를 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18) 지난 2018년 인천 계양구에서는 30대 남자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차례 주먹으로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캣맘’ 폭행한 30대 영장... 피해자 중상”, 한국일보 이환직 기자, 2018. 11. 27.). 또한, 길고양이 밥통에 가래침을 뱉고 쥐약을 두는 등의 일이 벌어진 아파트도 있습니다(“길고양이 밥통에 가래침과 쥐약...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 오마이뉴스 장은미 기자, 2019. 8. 16.).

(3) 일반적 분쟁 해결 절차

(가) 길고양이 학대행위의 경우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또는 학대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일부 학대자의 경우에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므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학대행위를 중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학대로 인한 길고양이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거나 또는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한 분쟁의 경우

길고양이 돌봄 행위로 인한 분쟁의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한 설득과 이해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먼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함부로 금지할 수 없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도 ‘캣맘’ 등과 같이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등의 행위는 법상 정당한 행위로서 막무가내로 금지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¹⁹⁾ 또

19)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제1항 내지 제4항), 모든 국민은 이러한 시책에 협조하는 등으로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즉, 동물보호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길고양이에게 밥과 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는 이러한 동물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로 인하여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는 등으로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사실 등을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길고양이를 위한 밥그릇을 부수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형법상 손괴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여도 여전히 길고양이 돌봄 행위에 대한 거부 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함께 논의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1조 등에 근거하여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있는바,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위촉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③ 명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2.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4.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다. 공동주택 분쟁

(1) 공동주택 분쟁 예방을 위한 반려인의 법적 의무

도시 생활자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

싼 공동주택 내에서의 분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물림 사고,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예 입주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반려인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① 소유자의 성명, ② 소유자의 전화번호, ③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도 하나, 동물등록을 하였어도 인식표는 반드시 부착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인 목줄 또는 가슴줄의 착용, 또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어린 반려동물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 직접 안아서 외출할 수도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맹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유형별 분쟁지원 중 “2.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웃 간 분쟁”의 “가. 개물림 사고 관련 분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출 중 반려동물이 배설을 하면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대변은 물론이고, 소변이라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용공간 또는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다가 배설한 것이라면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만약 반려인 등이 위 세 가지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기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사육을 둘러싼 분쟁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웃이 반려동물로 인한 위협을 느끼거나, 혹은 배설물 등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이웃이 악취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의 사육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려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반려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 금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등이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그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의한 사육 금지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란 주로 ① 공용부분(승강기, 복도,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② 반려동물로 인해 공용부분으로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③ 반려동물이 입주자들에게 위협, 위해, 혐오를 주는 행위 등과 같이 반려동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려동물의 크기, 무게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반려동물의 고유한 특성, 다른 이웃들의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웃에 사는 골든 리트리버 개의 사육 금지를 신청한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이 기르는 반려견(15kg 이상의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사육 및 복도 출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하여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 (중략) …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애완견도 성품이 유순하여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중략) … 상당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애완견이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려견을 사육하는 행위가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자 2011카합1379 결정).

이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작성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myapt.molit.go.kr>)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찾아보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관하여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로 인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이를 이유로 반려동물의 사육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웃에 사는 골든 리트리버 개의 사육 금지를 신청한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사육 및 복도 출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가 관리규약을 위반한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규약의 위반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당해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금지를 구할 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자 2011카합1379 결정).

(3) 분쟁 해결 방법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절차를 먼저 이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위원회는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등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조정기구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웃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각종 조정기구를 마련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또는 긁거나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 소음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반려동물 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1조).

이러한 조정 절차를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공용부분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유의할 사항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문의가 들어옵니다. 버스, 지하철, 철도 등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전용 이동 장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이라면 대개 반려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버스, 지하철 : 운송사업자별 운송약관 참조
(예 :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고속버스 운송약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등)
2. 기차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참조
3. 택시 : 개별 택시사업자별 운송약관 참조

3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가. 자가진료

(1) 반려동물 자가진료 사례들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컨대 가정집에서 불법적으로 동물생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인공수정, 제왕절개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반려인이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이동이 까다롭다는 이유 등으로 주사용 백신을 반려동물에 자가접종하여 환축추아탈구(목뼈의 관절이 벌어져 목신경의 압박으로 통증이나 심한 경우 마비까지 야기하는 질환)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자가진료 행위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려동물 자가진료 관련 법령

자가진료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수의사법은 2017년 7월부터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과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만 자가진료를 허용함으로써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만일, 자가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 자가진료를 할 경우 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3) 분쟁 해결 방법

몇 해 전 방송을 통해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개를 강제로 임신시키기 위해 발정 유도제 등 호르몬제를 과다 투여하거나 수차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등 충격적인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행위는 허용되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도된 업자들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 행하는 자가처치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일까요? 반려인이 반려동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처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능한 반려동물 자가처치를 구분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발라주는 행위, 통상적인 외부 기생충 구제, 단순 귀 청소 및 세척 행위,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에서 동물약품을 구입하여 주사·투약하는 행위,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으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의사 아닌 자에 의한 안락사

(1) 수의사 아닌 자에 의한 안락사가 문제된 사례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나 사설동물보호소는 보호동물을 입양 보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수의사 아닌 보호소 직원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유기동물에게 마취제를 쓰지 않은 채 고통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은 동물보호소에서 기존 반려인(양육 포기자)으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 원 상당의 파양비를 지급받은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거나 임의로 안락사를 시키는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의사 아닌 자에 의한 안락사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동물 안락사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가 안락사하는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제1항). 이 때 인도적인 방법이란, 마취를 실시한 후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마취제를 정맥 주사하여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방법이 있으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22조 제3항), 반드시 수의사가 시행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물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학

대행위로 규정하고(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3) 분쟁 해결 방법

수의사 아닌 자가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안락사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나, 동물에 대한 안락사가 수의사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안락사를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버려지고 있는 동물이 12만 마리에 달하고 그 중 70% 가량이 안락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법은 동물 안락사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한 입법의 불비로 여겨집니다.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동물의 안락사는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마취 등 일정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 안락사 판례

동물들에 대한 학대행위방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직원이 유기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개, 고양이 179두를 안락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수의사의 진단 없이 안락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8고정1633 판결).

동물 안락사를 진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수의사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의 진료’를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동물의 진료 또는 예방’을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라고 해석하면서,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한다거나 진료에 부수되거나 그 기능을 좋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6394 판결).

다. 수의료 사고

(1) 수의료 분쟁 유형

미국에서는 수의사의 수의료과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매년 약 2,000건 이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수의료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현재는 상당수의 사건들이 조정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점점 수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의료 분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① 진단 및 검사 단계의 의료사고 : 만일 수의사가 진단을 잘못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의사는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혹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진하여 반려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치료 및 처치 단계의 의료사고 : 치료 및 처치단계에서의 의료사고는 대개 투약, 주사, 마취, 수술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 ③ 사후 관리 단계의 의료사고 : 치료 및 처치 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입원 중 경과 관찰, 부적절한 약 처방, 혹은 입원 중 원인으로 퇴원 후 사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수의료 분쟁 관련 법령

수의사법에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직접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수의사는 자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고, 이 때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 그리고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수의사법 제12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치료위임계약’이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대해 성실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3) 분쟁 해결 방법

수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료사고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범위,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중요합니다.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 수의사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유리할 것입니다.

① 동물병원 진료기록의 문제 : 수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반려인 가장 먼저 확보하려는 자료는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일 것입니다. 수의사가 작성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은 반려동물에 대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마취기록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고 실험실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수의사법에는 의료법 제21조와 같이 수의사의 진료기록 송부 등 의무를 규정한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진단서 등) 제3항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등의 발급의무를 규정했을 뿐 수의사의 진료기록 열람·등사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문언상으로만 본다면 수의사에게는 진료기록의 송부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반려인은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보전 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등

의 방법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의무기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은 수의료소송 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펫 보험금 청구 등 소비자의 권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필요합니다.

② 수의사의 주의의무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는데 수의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의사가 진료행위에서 부담하는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는,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진료하고, 그러한 지식과 기술 수준에서 동물의 건강이 악화될 것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주의의무를 말합니다.

③ 수의사의 설명의무 : 일반적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중략)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뜻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과잉진료행위 등’의 사유로서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때 ‘설명’을 다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소송 과정에서 반려인에게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및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수의사의 의료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재산적 손해로서 치료비와 동물 입양비용에 상응하는 가액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로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동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직원의 실수로 플라스틱을 내시경 주입구를 삼켜 반려묘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주입구를 삼킨 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몸상태가 좋지 않았던 고양이가 받았을 스트레스와 그 과정에서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소7330644 판결).

빈뇨, 혈뇨 등의 증상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다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방광염과 방광결석 진단을 받은 반려견에 대하여, 법원은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데 대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① 반려견에게 혈뇨, 빈뇨 등의 증상이 있었고, 뇨단백 수치가 pH8이었음에도 뇨침사검사 및 소변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② 반려견에 대한 초음파검사상 슬러지가 관찰되었음에도 방광벽의 두께를 측정하지 않아 방광염의 발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③ 방광염 및 방광결석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방을 한 과실 등)하여 손해배상으로 8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판결).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수의료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의 인정 범위, 위자료 액수, 입증의 정도 등을 국내 사건보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유리하게 인정되는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의료사고 손해배상 판례

당뇨병이 있는 반려견에게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아 사망한 사안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당뇨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진료개시단계부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수의사의 과실과 반려견의 죽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140만 엔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03년 와 제16710호).

반려묘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좌우 쌍방의 요관을 난소동맥과 함께 잘못 결찰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수술 후의 상세한 관찰과 기록, 해부조직표본의 존재 등을 통해 수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90만엔(재산적 손해 50만 엔, 위자료 20만 엔, 변호사 비용 20만 엔)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우츠노미야지방법원 1997년 와 제529호).

반려견이 수의사에게 종괴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반려동물은 재산권의 객체에 그치지 않고 소유주의 반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치료 계약을 수의사와 체결하는 소유주는 그 동물에게 어떠한 치료를 받게 할지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야 하며, 수의사는 소유주가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명 의무로서 요구되는 설명의 범위는 해당 치료 방법을 받게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질환의 진단, 치료계획의 방법과 내용, 그 치료에 따른 위험성,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과 이해, 예후 등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고 하여, 수의사에 의한 치료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다음, 치료비 및 위자료로 42만엔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나고야고등법원 가나자와지부 2003년 네 제330호).

그밖에 동물약품은 인체약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 진열 및 판매, 주사바늘 찔림 사고, 병원내 감염,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교통사고

가. 반려동물 동승 시 차량 탑승 방법

(1) 승차방법의 제한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2) 입법 취지 및 준수 방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의 운전은 만취 상태의 운전과 같다”라고 할 만큼 위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에 앉혀 운전하는 경우, 시야확보가 어렵고 전방주시율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므로(도로교통법 제156조 1호), 반려인과 반려동물,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동물은 케이지, 리드줄 또는 동물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뒷좌석에 탑승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 반려동물과 동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 적용 및 위자료 인정 여부

(1) 대물배상으로 처리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점차 가족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 보

협사에서는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여전히 대물로 취급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고, 분양가 상당액 또는 시가 상당액을 그 배상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위자료 인정 여부

최근 들어 동물관련 사고가 법적 분쟁으로 변지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개의 사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도 보전된다고 할 것인바, 위 개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43469 판결)”라고 판시하여 위자료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아닌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반려견의 소유자는 그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나57091판결)”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치료비 등과 함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에 작은 개 한 마리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상

황에서 운전자가 미처 개를 보지 못한 채 충격하는 바람에 강아지의 다리와 척추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고 1,100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된 사안에서, 비록 반려동물의 분양비는 4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법원은 반려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430만 원을 물어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원고의 반려견이 다른 승용차에 치어 앞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도 치료 비용과 함께 자신의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반려인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반려인의 손을 들어 18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3) 반려동물의 사고를 보상에 주는 전문보험의 적용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비교적 대동소이한 내용의 반려동물보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 약관을 예시적으로 확인해보면 질병 상해의 경우 진료비, 치료비,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약값, 주사비, 응급실비, 마취비까지 전국 어느병원(대학병원 포함)을 이용하든 보험이 적용되고, 질병, 상해에 대한 보상은 치료일수에 관계없이 발생한 질병과 상해가 완치될 때까지 총 의료비의 70%를 보상하되 하나의 사고 당 100만 원씩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사고 당 보상(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하며, 가입한 애견이 타인이나 타인의 동물을 물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하나의 사고 당 100만 원씩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사고 당 보상(사고 당 자기부담금 10만 원, 다만 사고 당 한도제한이 없는 보험 상품도 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고의로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적용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최근 일부 수의사 단체에서 수의사법상 진료기록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다 반려인들이 진료기록부에 적힌 약품으로 자가진료를 실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사본 대신 진단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권고하는 등 진료기록부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운바, 보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보험사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진단서나 영수증만으로는 수술·약품 중

류 등 보험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손해를 관리나 꾸준한 상품 판매와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및 사람의 경우 의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진료기록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병원 역시 진료기록 제공을 통해 의료사고 방지는 물론 과도한 진료비 책정의 부작용을 방지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 구체적인 사고의 유형

(1)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과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운전자의 배상 책임

동물보호법상 등록된 대상동물이 반려인 없이 혼자 돌아다니거나, 반려인이 근처에 있더라도 동물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과 자동차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하여 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운전자는 형사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사고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나 우리 형법은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개가 목줄 없이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인 사건에 대해 “개 주인이 사고를 유발했다”며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으며, 반려인에게서는 개가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책임을 50%만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전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가 길옆에서, 기르던 개에게 참외를 주기 위해 길을 건너오도록 하였는데, 피고 측 차량이 그 개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법원은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참외를 주기 위하여 개에게 원고 쪽으로 길을 건너오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운전자가 차량을 저속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소5501).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원고는 공터 주차장에서 반려견의 목에 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앞서 거닐고 있었고, 강아지는 원고 뒤에서 원고를 따라 걷고 있던 상황에서, 차량운전자가 원고를 뒤따라 걷고 있던 이 사건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뀌어 강아지 우측 앞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차량운전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원고를 뒤따라 걷던 이 사건 강아지를 발견하였고, 더욱이 원고가 강아지 목에 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강아지가 자유로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강아지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애완견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주차장과 같이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진행하는 차량 앞을 지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고, 특히 차량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이 사건 강아지와 같은 작은 강아지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강아지를 데리고 주차장을 거닐 때 더욱 강아지의 동태를 살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아지 목에 줄을 묶지도 않고 강아지에 앞서 거닐면서 강아지의 동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50%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가단 414531 판결).

(나) 반려인의 배상 책임

안전장치 없이 돌아다니는 개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 차량의 손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반려인이 가해자에 해당, 운전자가 입은 차량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손상되고 운전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과실치사상(형법 제266조 또는

제267조)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인이 산책 중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실수로 놓쳐 반려동물과 차량 간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려인에게 동물의 안전장치를 놓친 부분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될지언정 고의적인 방치 등으로는 볼 수 없어 운전자 차량 손상 등에 대한 재물손괴의 고의가 부정되는 이상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전장치를 놓친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치사상의 죄책은 성립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목줄 등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반려동물과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줄 등 안전장치를 했음에도 반려동물과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려인이 안전장치의 줄을 길게 잡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려인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를 따질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과실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아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동물이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반려인은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동물에 대하여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에 준할 정도 즉, 반려동물의 분양가나 시가 상당액에 상응하는 비용만의 보상이 이루어짐이 일반적이고 반려인의 정신적 부분은 대물보상에서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반려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횡단보도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려인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때 반려인에게 30~60% 정도의 과실 비율이 인

정된 사례들이 있으며, 또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반려인의 과실 비율은 80%에서 90% 정도로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반려인이 산책 중 실수로 줄을 놓친 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H보험에서는 운전자와 반려인의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판단하여 보험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욱 높게 판단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온 반려견을 충격한 사건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의 반려견을 보지 못한 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운전자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원고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판단함과 아울러, 원고가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운전자는 원고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 12. 18. 선고 2019가소2068733 판결).

반면 차량의 운전자가 주행경로를 벗어나 차량이 차도가 아닌 인도로 돌진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반려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사고로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동물의 사상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펫푸드 제조물 책임

가. 사료관리법

사료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식품위생법이 아닌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동

물용 사료의 생산과 유통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등의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 등의 질병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 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나. 제조물책임법

사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생산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물은 법률상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배상액이 굉장히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D사 A사료 논란 사건

D사는 ‘진실한 먹거리’를 모티브로 내걸고 차별화된 성분 함유와 식중 스트레스 해소까지 가능한 애견 사료를 만든다고 홍보하는 사료회사였는데, 2016. 12.초경 D사에서 만든 사료들이 강아지들의 혈변, 설사, 구토, 탈수, 심지어 폐사의 원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소비자들의 항의 등이 빗발치게 되었고, D사는 해당 사료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배상 방안을 게시하였습니다.

D사는 홈페이지에 ‘A사료 최종 보고’라는 제목과 함께 사료 성분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발표 내용에 따르면 “A사료의 부작용 사례의 실제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한 각기 다른 6개의 사료 검증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사료협회, 동물약품기술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과학연구소)를 통해 성분 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기관을 통해 검사한 성분 내역은 총 84개 항목이며 이 항목들에서 유해성분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는데, 검사 결과들을 고려해봤을 때 A사료는 심각한 유해성분을 함유하지 않았고, A사료가 반려견의 이상증상 및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다”라고 밝혔으나, 소비자의 항의가 계속되자 기한을 정해 접수된 건들에 한해 환불 및 진료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H사 P사료의 곰팡이 오염 논란 사건

지난 2004년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H사의 P사료의 경우 곰팡이로 오염된 반려견 사료를 먹은 수많은 반려견이 죽거나 급성신부전증 등 후유증을 앓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반려인 174명이 사료 수입·판매 업체인 H사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H사 측은 각 반려인들과 일일이 합의를 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9-3호)

사료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9-3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중량부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성분이상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유효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 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 는 경우에 적용함
6) 동물폐사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가격 배상	

라. 최근 발생한 관련 사례

사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2019. 10.경 제주도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2019년 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사체를 처리하는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에 태우는 '렌더링'(rendering) 처리했고 이어 렌더링 처리해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유기견 육골분 25t분량이 시중에 유통되었는데 이에 제주도청 축산과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렌더링 업체 2곳을 계속 조사 중이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해당 업체에서 만든 사료는 전량 회수 및 폐기처분되었으나,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별다른 징계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 11. 19. 동물보호 단체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여 2020. 2.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6 장례절차

가. 반려동물의 죽음

(1) 반려동물 사체 처리의 문제점

동물의 사체는 현행법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옌,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되는 무단 투기 금지조항, ②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되는 임의매립 및 임의소각 금지 조항(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2)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법령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하고(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 제18조 제1항), 실험동물도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 다만 2007년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된 동물장묘시설

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나목).

(3) 위반 시 처벌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하면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전용 화장장을 이용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여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나. 반려동물의 장묘

(1) 장묘업체 이용의 문제점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반려인은 동물장묘업의 등록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화장업체나 장묘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다른 반려동물의 분골을 사용하거나, 무허가 구역에서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 또는 부실한 운영으로 반려인이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차량에 소각로를 싣고 다니며 이른바 이동식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는 동물장묘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2) 동물장묘업 관련 법령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고,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3조).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만일 등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동물장묘업을 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3) 분쟁 해결 방법

동물장묘업자는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하고,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동물장묘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반려인이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장묘업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기타 동물 이슈

》 제4장

기타 동물 이슈

1 야생동물

가. 야생동물 관련 법적 분쟁 유형

(1) 야생동물과 교통사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는 매년 증가해서 현재는 한 해에 1만 7천여건이나 발생합니다. 매일 40여마리의 야생동물이 도로 위에서 희생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운전자 역시 갑자기 야생동물과 마주치면 놀라 급제동이나 급커브를 시도하면서 자칫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유해야생동물과 포획의 문제

농촌 지역에서는 멧돼지가 농작물을 먹고 묘지를 훼손했다거나, 도심지역에서는 간혹 행인을 공격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멧돼지 출몰을 우려하여 먹이를 없앴으로써 오히려 멧돼지가 인가 등에 접근하게 된 영향이 크지만, 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하여 포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획의 방법과 포획한 야생 멧돼지 등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사냥도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잔인한 방법에 의한 사냥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냥개 등 사냥용 동물을 이용하여 사냥한 경우 사냥용 동

물을 사냥도구로 보아 규제할지 여부 등도 문제됩니다.

나. 야생동물 관련 법령

(1) 야생동물 교통사고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안전표지 중 하나로 야생동물 보호표지를 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4조), 이러한 야생동물 보호표지는 야생동물 보호지역임을 알리는 표지로서 보호지역의 시작 전 및 끝난 후 100m 내지 1k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법을 근거로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에서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차량에 치어 야생동물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통로 및 침입방지 울타리를 비롯한 주의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보호대책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차량에 치어 죽은 야생동물의 사체로 인하여 우려되는 교통안전과 미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사체의 처리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야생동물 포획 관련 법령

야생생물법에서는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포획을 금지하고(야생생물법 제14조), 이를 위반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야생동물의 등급에 따라 2년 내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야생생물법 제67조 내지 제69조).

멸종위기에 있지 않더라도 환경부령이 지정·관리하는 종에 대해서는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제외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포

획·채취하거나 죽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받아 포획 등이 가능합니다(야생생물법 제19조).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라 하더라도 환경부령에 따라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법 제23조제1항).

또한 설사 포획 등이 가능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야생생물법 제10조 및 제70조).

한편, 야생생물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고(야생생물법 제2조 제5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야생생물법 제23조 및 제23조의 2). 포획허가를 할 때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분쟁 해결 방법

(1) 야생생물법 위반

야생동물 학대 또는 불법 수렵에 대한 처벌로서, 야생동물을 독극물이나 도구 등을 사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야생생물법 제8조 및 제68조). 불법 수렵도 처벌조항이 있지만 아래 판결과 같이 실무상 동물을 포획한 것을 이유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여기거나 실제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냥개 등의 사냥용 도구 불인정 사건

전문 사냥꾼인 피고인이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야생동물을 수렵하려다가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야생동물(꿩) 포획 목적 불인정 사건

구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의 창문을 열고 느린 속도로 운행하면서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운전석 바로 옆에 두고 그 중 1발은 즉시 사격이 가능하도록 약실에 장전이 된 상태에서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은 야생동물 사냥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고, 영점사격용 표적판을 싣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08. 12. 24. 선고 2008노391 판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사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적절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및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9085 판결).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야생생물법 위반과 더불어 고래의 불법포획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고래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에서부터 유통, 해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절이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등에 의하면, 고래류는 조사·연구·구조·치료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포획이 금지되고 있고(고시 제4조), 다만 혼획(어로활동 중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좌초(해안가로 떠밀려 온 것)·표류(죽은 상태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만이 해경에 신고한 후 위판, 해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10조 등). 이 경우에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된 고래는 유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일 고래류를 불법포획하거나 판매 등을 하였다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및 제65조).

불법 포획된 고래류를 해체한 뒤 유통시키는 개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는 실행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법 어획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식용으로 이용되는 밍크고래의 경우 국내에서 2017년 한 해동안 혼획된 수가 80여 마리인데 비해 실제 유통되고 있는 수는 포획된 수의 3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통되고 있는 밍크고래 중 160여 마리는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밍크고래 포획 사건

선장과 선원들인 피고인들이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작살 등을 이용해 포획한 후 해체하여 운반·은닉·보관한 사안에서, 법원은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누구든지 바다에 투망해둔 어망 또는 어구 등에 걸려 자연적으로 죽은 고래를 발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또는 수산협동조합에 위탁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인 고래의 번식·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수산동물을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한 점과 고래를 작살로 찢어 실험사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인정하여 수산업법, 야생생물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988 판결).

2 전시/오락동물

가. 개괄

전시 또는 오락 목적과 관련된 동물에 관한 규율은 크게 동물보호법 관련조항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라 함)로 구분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제8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관한 동물전시업(제32조 제5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원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영업과 이곳에 속한 동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 오락과 동물

(1) 유희 목적 상해 금지(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희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 중 하나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²⁰⁾, 오락은 재물을 걸진 하나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도박에는 이르지 않은 것²¹⁾, 유희는 도박·오락처럼 재물을 걸지는 않아도 즐겁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 오락, 유희의 의미에 비추어 ‘등의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유희의 목적’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동물이 유희의 직접적 대상이 되거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광고는 도박·오락·유희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상업적 목적에 의한 이용이라 할지라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2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2) 도박 목적 이용 등 금지(제8조 제5항 제2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5항 제2호 전단). 이 조문의 반대해석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박 이외의 유희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물을 상(賞)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8조 제5항 제3호).

다.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상 반려의 목적이 있어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에 한하여만 반려동물로 인정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동물전시업이란 이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입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

동물전시업자는 동물의 전시실과 휴식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이중문 잠금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개에게는 운동공간, 고양이에게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별표9]). 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을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라. 동물원법

(1) 연혁

동물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적 법률에 분산되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운영·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지원체계도 미흡하여 시설 운영이 어렵고, 동물원·수족

관의 보유 생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 5. 3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 관계

(가) 특별법

동물원법은 동물원 관계자와 동물 간의 관계에선 동물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물원 이용자와 동물 간에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나) 동물전시업

동물보호법 상 동물전시업의 요건과 동물원법 상 동물원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는 동물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전시업에 관한 동물보호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호 단서).

(3) 동물원의 정의

동물원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동물원법 제2조, 동물원법 시행령 제2조).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2019년 6월 기준 동물원법에 등록되어 운영중인 시설은 110개소입니다.²²⁾

22)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2020),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20쪽

(4) 학대행위 금지

동물원법 제7조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학대행위(제1호), 도구·약물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2호),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호), 동물에게 먹이 또는 급수를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제4호)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자를 처벌합니다(동물원법 제16조). 나아가 법인 등의 종업원이 동물원법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등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동물원법 제17조).

일반적으로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지만(동물보호법 제7조 제1항)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동물보호법 제7조 제4호, 제16조 제2항 제3호). 또한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과 달리(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제46조 제2항 제1호), 동물원법은 광고·전시 등의 목적으로 때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동물원법 제7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동물원법이 동물보호법보다 보호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적절한 서식환경 제공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물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제6조).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중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생물종을 별도로 조사하거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6조의2), 이에 따라 2018년 9월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며 실제 동물원의 환경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가 발간되기도

하였습니다.²³⁾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는 생물 종에 따라 제공해야 할 사육환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동물원지침 모범사례(EU Zoo Directive Good Practices Document), 영국의 현대동물원운영지침(SEcretary of State's Standard of Modern Zoo Practices), 스위스 동물복지법에 따른 동물복지조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전시동물복지법, 뉴질랜드의 전시동물복지법 규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²⁴⁾

마. 구체적 사례

(1) 소싸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든 소싸움은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소싸움 사건

피고인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한 후 소싸움을 벌여 소의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동물학대죄 등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은 사건입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고단364등).

(2) 마차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말이나 말이 끄는 마차를 탈 수 있는 관광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영업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의 신체구조상 장시간 아스팔트 위를 걸으면 다리에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복

23)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2020), 16쪽

24)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2020), 143-149쪽

사열이 강한 여름철의 마차는 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마차를 끄는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동물 축제

최근 동물을 이용한 각종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라 할지라도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동물에게 유희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동물을 도박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축제입니다. 식용 목적의 어류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그런데 산천어 축제는 참가자들의 유희를 목적으로 위해 개최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²⁵⁾ 나름의 역사를 가진 소싸움의 경우에도 장관이 고시한 예외를 제외하곤 학대행위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체계에 비추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동물 학대를 정당화하는 해석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합니다.

(4) 동물 카페

인터넷에 동물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전국적으로 성업 중인 수십 곳 이상의 동물카페를 접할 수 있습니다. 동물카페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너구리, 라쿤, 양, 거북이 등 다양한 동물들을 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을 전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동물원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10종 이상이거나 50개체 이상을 보유한 시설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동물전시업에도, 동물원에도 해당하지 않은 동물카페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5) “산천어 축제는 동물학대” 동물단체, 화천군수 등 고발, 한겨레신문, 2020. 1. 9.

3 농장동물

가. 분쟁 유형 및 관련 법령

농장동물의 경우에는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며 양도담보 등과 같은 민사상 쟁점의 목적물로 자주 등장했었으나, 최근에는 생명과 권리의 관점에서 농장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농장동물 살처분 문제

특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행해집니다. 이러한 가축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한편(주로 “필요적 살처분”이라고 함),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주로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 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최근 들어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토착화, 상시화되면서 가축 살처분도 정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동물권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²⁶⁾ 2019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발생으로 15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땅에 파묻는 등으로 살처분한 가축의 수가 1억 마리²⁷⁾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하였습니다.²⁸⁾

이러한 가축 살처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인권과 환경권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동물 사체를 매장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가 하면, 매몰지 부근 토양 및 지하수 등의 오염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농장동물 학대 문제

농장동물은 애초부터 도축을 목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유류, 조류의 경우에는 식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에 해당하는바, 소, 돼지, 닭 등의 농장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은 농장동물이 당연히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제4장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6) 함태성,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27)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28) “돼지열병 살처분 불과 15만? 20년간 1억 가축 파묻었다”, 한국경제, 강종구·김민성 기자, 2019. 10. 22.

나. 분쟁해결방안

(1) 농장동물 살처분 문제의 경우

농장동물 살처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행정소송이 진행됩니다. 즉,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장동물의 소유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로 예방적 살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취소소송에 앞서 일반적으로 살처분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 또는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살처분 명령이 그 발동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즉, 예방적 살처분 명령의 대상이 된 지역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단서상의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2) 농장동물 학대의 경우

농장동물 학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대사건과 마찬가지로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시설기준을 정한 법령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청구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권을 침해하여 축산법 제22조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위헌확인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로서는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기준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고, 그 규제 정도도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만으로 곧바로 가축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전원재판부 2015. 9. 24. 결정 2013헌마384).

다. 판례 등 관련 사례

(1) 농장동물 살처분 관련 - ‘참사랑 농장’ 사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참사랑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으로,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에 따른 닭장보다 넓은 닭장에서 산란용 토종닭 5천마리를 풀어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에서 2.05km 떨어진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농장주는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항고심에서 인용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살처분 집행으로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동시에 “농가가 있는 지역이 보호지역²⁹⁾에서 예찰지역³⁰⁾으로 전환되고 익산시장도 농장주가 생산한 계란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판매를 허용한 사정 등도 감안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5. 16. 선고 2017루1002 결정).

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739 판결), 항소 역시 기각되어 2020. 1.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위 취소소송 1심 판결은 참사랑 농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상 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참사랑 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의 판단상의 미비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29)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의 지역

30)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부터 10km 이내의 지역

(2) 농장동물 학대 관련 - 암소 생식기 안에 팔을 넣어 상해를 입힌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축사에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암소의 생식기 내로 팔을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간하였고, 그 결과 암소 1마리를 죽게 하고 6마리의 생식기능을 잃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1855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상의 학대행위, 즉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기준에 따라 도살하는 것 이외에 농장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4 실험동물

가. 동물실험의 원칙

(1) 동물실험의 기본 원칙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함)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한 후,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하거나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

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찬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우나, 법에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동물실험의 3대 원칙(①대체(Relacement): 되도록 다른 방법을 써라, ②감소(Reduction): 사용되는 동물을 최대한 줄여라, ③개선(Refinement): 동물 사육이나 실험 조건을 최대한 개선하라)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물실험이 시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동물실험의 종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총 37만 7163마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동물실험은 주로 ①실험 물질을 섭취하였을 때, 그 물질이 배아에 기형을 야기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형 유발 실험, ②수컷 혹은 암컷의 번식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을 구별해내는 번식력 독성 실험, ③어떤 물질이 발암성을 가진 것인지 알아내기 위한 발암성 실험, ④시간의 진행에 따른 독성 영향을 알기 위한 독성 약동학 실험, ⑤실험 그룹으로 나누어진 동물들에게 점차 실험 물질을 증가시켜 동물이 사망에 이르는데 쓰이는 물질의 양을 알아내기 위한 치사량 테스트 실험 등의 분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나. 동물실험 관련 규정

(1) 동물보호법

(가) 동물실험의 금지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

거나 사육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항).

다만,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유실·유기동물, 사육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위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 이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5호).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사육견을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동물실험에 이용하여 문제가 된 사건

비글 품종의 ‘메이’는 2012. 10. 서울대학교 수의대 연구팀에 의해 탄생한 복제견인데, 농림부 검역본부로 이관되어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2018년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L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서 동물실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관을 요청하였고, 재차 이관받은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사육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2019. 4.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되었고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나)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는 2020. 3. 21.부터 시행되는 신설규정으로,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5의2호).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설치한 동물보호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동물해부실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되, 동물의 사체를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허용한다는 시행규칙이 2020. 2.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안 제23조의2).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실험”이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하며,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나아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한정됩니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실험동물 공급과 관련된 규정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 다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동물실험시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실험동물의 무분별한 반입을 규제하고 있고(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그런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동물용 의약품은 제외),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동물실험이 자행되고 있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2018. 4. 24.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적용대상을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개발·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기관에서 교육·시험·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 및 사용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시험·연구를 포함하도록 하는 안(안 제3조제3호 신설) 및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안 제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신설)이 포함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2020. 2. 현재까지도 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이 재래시장 내 건강원에서 사온 것으로 밝혀진 사례

국립대인 경북대 수의대에서 산과실습을 위해 대구 칠성시장 소재 건강원에서 개 8마리를 구입 하였으나,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는 ‘서울동물센터’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실습을 진행한 사안에 대하여, 실험동물공급업체가 아닌 곳으로부터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해 왔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동물 보호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연구진의 처벌이 어려운 난점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2019. 12. 동물보호단체는 담당 교수를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서울대 수의대에서 개농장 개들의 난자를 채취하여 실험에 이용한 사례

2017. 11.경 서울대 수의과대학 L교수 연구팀은 복제견을 만들기 위한 실험견 100여 마리를 식용견 농장에서 들여왔는데, 배를 가르고 난자를 채취한 후, 임신에 성공한 개는 제왕절개로 새끼를 낳고, 실패한 개들은 일단 개농장으로 돌려보낸 뒤 일정 기간 후 다시 데려와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실험동물공급업체가 아닌 개농장으로부터 개들을 공급받아 실험에 이용해 왔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개농장의 개들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여도 연구진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개들이 난자채취를 위해 연구실로 오기 전 개농장에서 먼저 개들의 혈액을 보내와 연구실에서 호르몬 검사를 했고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들만 실험실로 반입됐다는 증언에 따라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무자격자인 개농장 주인이 L교수의 지시에 따라 농장 내 개들에 대해 직접 혈액채취를 한 부분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2호의 동물학대(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로 2019. 4.경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관련된 현행 법 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실험동물법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고 규정(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단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일한 윤리위원회로 같은 기능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동물보호법 제25조 제2항),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동물보호법 제26조 제1항),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되고(동물보호법 제26조 제2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6조 제3항).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합니다(동물보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윤리위원회에는 수의사 및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동물보호법 제27조 제3항),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7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7조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8조).

동물실험에 있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2019. 12. 29.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 현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당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② 동물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원회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윤리위원회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였다는 점을 고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 안전 사전검토,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규정하여 윤리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장

동물사건 법률지원 시 tip

》 제5장

동물사건 법률지원 시 tip

1 상담 관련 일반 자세

동물관련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절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는 동물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생명에 관한 문제로 염두에 두고 대화에 임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동물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취급한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동물보호법 등의 관련 법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숙지한 후 적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거의 체계적 수집 필요성

피해 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관련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에서는 유전자 검사 및 부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사망 등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기관을 통해 자료를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제도(정보공개포

털, <https://open.go.kr/>)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언론 또는 국민 청원 등을 통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부각

동물관련 사건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도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법한 사안도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거나 국민청원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도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심사숙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에 의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하는바, 언론, 집회 등의 방법이나 탄원서, 진정서 등을 통한 의사전달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청원, SNS, 언론제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대사실을 알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한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채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6장

유관기관

》 제6장

유관기관

1 동물보호센터

가. 설치 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보호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제2항),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나. 주요 업무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포획·구조 및 운송하고, 보호조치 및 질병관리를 하며,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혹은 희망자에게 분양하고,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참조).

각 지자체별 동물보호센터 설치 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http://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포인핸드(Paw in Han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

게 확인할 수 있는바, 유실동물을 찾거나 혹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 동물보호콜센터(1577-0954)의 활용

동물보호콜센터(1577-0954)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보호상담센터입니다. 동물등록 등과 같은 반려동물 관련사항, 유실·유기동물 관련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산하 기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최근 서울시는 관련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기관을 설치한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지하 1층
- 홈페이지 : <http://animal.seoul.go.kr>
- 전화번호 : 02-2124-2839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기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응급유기동물 치료 및 입양문화 확산 사업 등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 산하 기관으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나.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72
- 홈페이지 : <http://animal.seoul.go.kr/center>
- 전화번호 : 카라(02-3482-0999) / 동물보호과(02-2133-7648)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는 반려견 보호자와 예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려견 사회화 및 기본 예절 교육 프로그램, 반려동물 문제행동 상담 및 교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물보호단체

가. 주요 업무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동물권 또는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각종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동물 관련 이슈를 모두 다루는 동물권단체부터 특정 동물(예: 길고양이, 전시동물, 야생동물 등)과 관련된 이슈만을 다루는 동물보호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동물 관련 법, 제도,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권교육 및 캠페인, 그리고 동물구조지원사업 등을 주로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만한 동물학대행위 또는 동물권 이슈 등이 발생했을 시 이를 공론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나. 활용 방법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으나 혼자 힘으로는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물구조에 특화된 단체의 경우에는 구조를 위한 장비 등을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끔찍한 동물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공론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형사소송 진행 시 단체의 공론화를 통해 수천, 수만 명의 처벌 요구 서명이 모이기도 합니다.

다. 단체 현황

대표적인 단체로는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이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 홈페이지 : www.ekara.org
- 전화번호 : 02-3482-0999

동물자유연대

- 홈페이지 : www.animals.or.kr
- 전화번호 : 02-2292-6337

4 관련 법조단체

동물 관련 법령 및 판례동향 등을 연구하는 법조단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단체들은 동물 관련 소송에 직접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소송지원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부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3. 22.〉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나.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동물의 소유자등은 사육·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사육환경

- 1) 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하여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18. 9. 21.〉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제4조제5항 관련)

1.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 나.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 다.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것
 - 1)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 라. 동물을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 추위, 눈,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 마.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2. 동물의 위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할 것
- 나.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할 것
- 다.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라.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 마.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바.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9. 3. 21.〉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

1. 격리조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해야 한다.

- 1)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 2) 1)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람을 공격하거나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등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할 것.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해야 한다.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가목에 따른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센터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한 맹견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나. 보호조치 장소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도 조례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맹견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유자등에게 격리

및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호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맹견을 소유자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보호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해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그 사유를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9. 21.〉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 다)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사설을 설치해야 한다.
- 라) 화장로와 건조·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수

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전자상거래중개 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중개하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6)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다목의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

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동물의 몸길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이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2단까지만 쌓을 것
-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격리실

-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리된 것으로 본다.
-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동물전시업

-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

-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

-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미용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4)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추어야 한다.
- 5) 3) 및 4)의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 가)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를 반려동물의 이동미용 용도로 표시한 경우
 - 나) 반려동물의 이동목욕 용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아. 동물운송업

- 1)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설비를 갖추는 것
 -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
 -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1)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9. 8. 26.〉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해야 한다.
-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 1)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 가) 개·고양이: 2개월 이상
 - 나) 그 외의 동물: 젖을 떼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 2)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 3)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 라)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 5) 4)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매매(분양)금액	금 원 정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	------------	---------	-------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동물의 종류		품 종		성별	암 / 수
출생일		부		모	
입수일		생산자/수입자 정보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현재 상태	[]양호 []이상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예 []아니오
세부 기록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4. 분쟁해결기준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 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 (분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매수인 (입양인)	주소				서명 날인	(인)
	연락처		성명			

- 6)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안 된다.
- 7)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 8)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나)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다)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 마)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바)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 9)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2)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 3)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발톱 깎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 동물전시업자

-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관리해야 한다.
-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미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2)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 3)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4)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 5)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인 회장 박 종 우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전 화 02) 6200-6200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동물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